

〈‘이공계 살리기 대책과 전망’ 심포지엄〉

이공계 살리기: “병역특례 확대...정치참여 활성화”



글 _ 김길태 사이언스타임즈 기자 bigbang@ksf.or.kr



① ② 박호군 과기부 장관은 주제발표에서 과학기술계 스스로 문제를 풀어가자고 말했다.

③ 이공계 출신의 대체군복무를 주장한 이상희 한나라당 의원

전국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농학계 대학장 협의회와 전국대학기초과학연구소연합회 등 4개 단체는 지난 11월 20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이공계 살리기: 대책과 방안’이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박호군 과기부 장관과 전국 이공계 학장, 김영환, 이강두, 정세균, 정우택 의원 등 여야 4개 정당 정책위의장, 김태유 청와대 정보과학기술 보좌관, 박기영 국가과학기술회의 수석간사 등 과기정책관련 인사들과 손 욱 삼성중기원 원장, 김유승 KIST원장 등 정부-민간 연구소에서도 참석했다.

이공계 위기라는 말은 수없이 나온 사안이지만 이공계 대학들이 직접 이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낸 것과 정책관련자들이 대거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는 그 동안 ‘과학기술인들이 연구실 안에 머무를 뿐 한국과학기술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내놓지 못했다’는 반성과 함께 ▲이공계 지원특별법 제출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이공계 지원특별위원회 구성제의 ▲이공계생들의 대체군복무 실시 건의 ▲행정부, 국회 등에 이공계출신자 일정비율 등용 등에 대해서 협의했다.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지상 중계해 이공계 살리기의 대책과 방안에 대해 점검해 본다.

‘선택과 집중’으로 이공계 위기 돌파

박호균 과학기술부 장관은 ‘이공계 육성 대책과 방안’이라는 강연을 통해 “이공계 위기는 실제보다 더욱 부정적 측면이 부각돼,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킨 감이 있다”며 “이제는 ‘꿈을 실현하는 과학자의 모습’, ‘과학기술계 스스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모습’ 등을 통해 과기계의 긍정적인 측면을 보여주자”고 말했다.

또한 박 장관은 인재 육성과 관련 ‘대학이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자기노력에 대한 반성과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키워내고, 졸업 후에도 배출한 인재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을 보여줬다.

두 번째 강연자로 참석한 국회정보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상희 의원은 ‘이공계를 외면하면 국제시장에서 외면받는다’라는 강연을 통해 국가가 과학기술인을 정책적으로 우대하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제는 의견제시보다 실질적인 움직임

을 보여야 할 때”라며 ‘청와대부터 이공계 출신 할당제를 도입하고, 이공계 출신의 대체근복무제, 연구개발에 대한 과감한 보상제도 등의 법제화 필요’ 등을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이공계 위기와 관련 사회전반적인 모습에 대한 진단과 우선순위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곽재원 중앙일보 경제담당 부국장은 “이공계 문제는 선진국의 경우 GDP 2만 달러 정도에서 생겼지만 우리는 6천 달러 때부터 거론되기 시작했다”며 “심각성에 대해서 다시금 뒤돌아보고 경제시장논리로서 나타난 이공계 문제를 대학연구결과가 산업화와 연결되도록 대학과 산업이 연계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2010년까지 5조 원을 들이는 ‘차세대 성장동력 개발’과 관련, 이공계 대학의 실질적 참여를 강조했다.

이공계 문제가 대책을 논의하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경식 한국경제신문 부장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대책은 이

대통령에게 드리는 건의문 (전문)

과학기술 중심 사회 구축을 통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건설하시기 위해 불철주야 모든 힘을 쏟고 계시는 노무현 대통령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교육 현장에서 책임을 맡고 있는 전국 이공계 대학의 학장들은 무너지고 있는 이공계 인력 수급 상황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어, 이를 타개하기 위한 건의문을 올리는 바입니다.

작금의 상황은 우리 교육계에도 책임이 있다고 느끼며, 우리 스스로 머리를 숙여 반성합니다. 지금까지 안일한 자세로 한국과학기술의 미래에 대해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 오늘의 어려움을 초래한 한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가 기술의 도입 및 모방의 단계를 넘어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의 선진 복지국가로 진입하고, 우리의 민족 문화를 창달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에 의한 국가 경쟁력의 신장이 필수적입니다. 세계화와 그에 따른 무한경쟁의 21세기를 맞아, 우리 나라 과학기술의 혁신적인 발전은 우리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보증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점점 적은 수의 우수 청소년들이 이공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1세기의 창조적인 과학기술 발달을 주도하고 국제적인 경쟁에 나서야 할 인재가 오늘의 청소년임을 감안한다면, 더 많은 우수 청소년들의 이공계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런 현실 인식하에 지난 주 전국 자연과학대학장, 공과대학장 및 농학계 대학장 협의회에서는 ‘이공계 살리기: 대책과 방안’ 심포

미 다 나와 있다”며 “백화점식 대책나열이 아닌 정책적 우선순위를 결정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4년 과학기술 R&D 예산 7.7% 증대

이어진 2부 순서에서는 4개 정당의 정책위원회 의장들이 나와 이공계 육성대책을 발표했다.

김영환 새천년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 273명 중 이공계 출신이 10명도 안돼 과학기술인이 과학기술의 주요 정책 수립에 참여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과학기술인의 정치참여 활성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과학국방을 목표로 한 60만 군인 중 10만명 수준을 정보화 연구 인력으로 키워 국방관련기술과 함께 과학기술발전을 도모하는 대체복무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강두 한나라당 의원은 “이공계 기피현상 해소를 위해 이공계 인사가 지역구 경선 후보로 적극 참여토록 독려하고, 비례 대표에도 일정 비율 이상 적극 추천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대덕연구단지 모연연구소에 대해 구조조정을 안했다는 이유로 예산을 줄여 절반은 미국으로 나가고 일부 박사들은 몇 개월째 월급을 받지 못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며 “적극적인 과학기술 투자로 한국의 기초체력을 키우는 것이 이공계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병역특례 제도 관련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의견도 밝혔다.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원은 “솔직히 각 정당이 이공계 문제에 묘안이 있었으면 아마 그것을 진작 실행했을 것”이라며 대책수립의 어려움을 말했다. 정 의원은 “이공계 문제를 정책적으로만 해결할 수는 없지만 문제해결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일자리 창출과 재정지원을 꼽을 수 있는 만큼 내년 과학기술 R&D 예산 7.7% 증대 등 당 차원에서 다각도의 대책을 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이공계생들의 병역특례와 해외연수 확대, 2008년까지 정부 기술직 출신 비율을 30% 이상으로, 5급 신규 채용시

지엄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이공계 대학장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여기에서 토의된 여러 대책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1. 과학기술인의 사기 진작을 위해 대통령께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시고 이를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행정부, 입법부, 산업계, 학계, 연구계를 망라한 비상협의체 구성으로 각 분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주십시오.
2. 현재와 같은 이공계 인력수급은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큰 장애가 될 것이므로, 여성인력의 활용 등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3. 우수한 이공계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의 대학 체제와 대학입시 제도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4. 대학의 교육 수준 향상을 통한 우수 이공계 인력 배출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대학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정책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5. 이공계에 우수한 인력이 계속적으로 유입되기 위해, 과학기술인 연금제도 및 장학생제도의 수혜폭 확대, 가숙사 시설 확대, 병역의 대체 근무제도 등을 마련해 주십시오.

전국의 이공계 대학 교수들은 위와 같은 정부 시책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각오를 밝힙니다. 고맙습니다.

2003. 11. 26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이공계대학장 비상대책위원회

기술직 비율을 40% 이상 높이는 방안 추진도 밝혔다.

4당 의원 중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정우택 자민련 의원은 “정부가 전문연구요원 수를 줄이고 있는데 이공계인들은 의견 조차 내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국회의 정보통신과학위원회 등 과학기술관련 위원회가 있으므로, 이공계 교수들이 한 목소리를 모아 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지속적 만남을 통해 의견을 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공계 문제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교수들이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관련 문제를 정책화·법제화 하는데 힘을 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토론자들은 과학기술인들의 사회경제적 보상책과 과학교육의 문제점, 대학과 산업간의 이공계 인력 공유, 기업의 이공계 인력 흡수책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김유승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은 “이공계 기피는 IMF 이후 1순위로 명예퇴직한 이공계인들의 모습과 닮아지는 퇴직연령, 미래 불확실성 등이 야기한 문제라”며 “정부의 과학기술인들에 대한 고용불안정 해결과 사회경제적 보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기영 순천대 교수는 “과학기술은 우리 경제의 55% 이상을 기여하고 있지만, 연구성과가 경제 가치를 창출하는 데는 부족

하고 연구실 속의 연구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며 “과학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것과 대학에 남아있는 70% 이상의 이공계 박사인력을 산학연 프로그램 등을 통해 활용하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포지엄 마지막 정책발표로 나선 김태유 청와대 정보과학기술 보좌관은 “신진국의 성공 이면에는 파격적인 과학기술자 우대 정책이 있었다”며 “참여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과학기술중심사회’를 이뤄 국민소득 2만 달러 국가로 도약하자”고 말했다.

이날 열린 ‘이공계 살리기: 대책과 방안 심포지엄’은 당사자인 학계에서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공계 학장단은 심포지엄에 그치지 않고 6일 후(11월 26일) 같은 장소에서 ‘대통령께 드리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입법부 행정부 산업계 학계 연구계를 망라하는 비상협의체 구성 ▲이공계 여성인력 활용 등 인력수급체제 개선 ▲대학입시제도 개선을 통한 이공계 인재선발 자율권 보장 ▲대학 교육수준 향상을 위한 정부 및 기업투자 활성화 ▲기숙사 확충, 병역 대체복무제 도입과 같은 구체적인 유인책 마련 등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㉔

〈이공계 현황표〉

단위 : 명

		총 인원	이 공 계	비 율
청와대 (비서관 이상)		51	2	4.0%
정부 (3급 이상 공무원)		1,489	245	17.0%
국 회	전 체	273	18	7.0%
	(비례대표)	(46)	(5)	(10.0%)
한나라당	전체	128	16	12.0%
	(비례대표)	(21)	(4)	(20.0%)